

에너지부문 시스템 전환을 촉진하는 에너지가격체계 실현 필요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전통적인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시스템을 청정에너지 기반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미-중 무역분쟁, COVID-19, 러-우 전쟁과 같은 국제 이슈들은 에너지·자원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우리는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면서도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적인 과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김 현 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은 지정학적 위험을 고조시키며, 원유에 대한 수급 불안정 우려를 바탕으로 국제유가의 변동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 향후 세계 에너지 시장은 지정학적 대립 구도를 바탕으로 경제와 안보를 중심으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창출될 청정에너지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중립의 이행을 위해서는 시장 메커니즘이 중요하다. 기술혁신이나 신시장 창출을 위한 유인체계를 수립하고, 에너지 시장에서 비효율 유발 요소들을 제거하는 정부의 시장관리자 역할도 중요하다. 하지만 합리적이고 유연한 에너지 요금제도 확립이 선행되어야만 정책의 실효성도 담보될 수 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원가주의에 기반한 에너지 요금체계 구축의 필요성이다. 에너지 소비주체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향상, 저탄소기술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에너지 요금이 정상화되어야만 우리나라의 각 부문 경제주체들이 탄소중립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유인체제로 기능할 것이다. 따라서 원가의 변동분을 판매요금에 시의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

궁극적으로는 원가를 비롯하여 환경 및 안보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가격 체계를 실현해야 한다. 그것이 탄소중립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다. IEA는 미래세대가 부담할 탄소의 사회적 비용까지 에너지 요금에 반영되어야 장기적으로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다고 제언한다.

탄소 비용을 에너지 요금으로 내부화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가격 규제 방식이고, 두 번째는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양적 규제 방식이다. 양자는 형식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탄소를 배출하는 권리를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회 구성원에게 부담하게 만드는 특징을 지닌다.

탄소배출 비용이 에너지 요금에 내재될 경우,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력 도매시장에서 급전 순위가 변화하여 저탄소 발전원이 우선 가동될 수 있고, 탄소배출이 많은 발전기에 효율 개선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탄소배출 비용은 에너지 요금 상승을 통해 효율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개발 및 효율개선 사업 등을 가능케 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22년 수행한 연구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2030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탄소비용 부과 방안들을 분석한 바 있다. 해당 연구는 효율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서 에너지세제를 빠르게 개편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탄소가격을 반영하는 세제 개편 방식에 따라 연료 간 상대세율, 에너지요금, 세수 등에 대한 영향이 상이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조세 저항 등 국민수용성을 함께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방식을 선정하여 세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원가를 적시에 반영한 합리적인 에너지 가격 체계와 유연하고 탄력적인 요금 제도가 완비되었을 때 탄소비용 내재화에 따른 수요억제 효과를 극대화하여 탄소저감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원가주의에 기반한 에너지 요금체계와 더불어 환경과 안보의 가치를 에너지 가격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에너지 안보 제고와 탄소중립 이행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한 선결조건임을 기억하자.

